

시론

원유전쟁과 호르무즈 이중봉쇄, 한국경제는 어디로 가나



김 일 태 전남대 석좌교수

미국과 이란은 전쟁 발발 6주차가 되면서 2주 휴전으로 종전 협상을 시작했다. 최대 쟁점은 배상금, 호르무즈 자유 통행과 우리농 농축 금지 기간이다. 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한 때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브렌트유 기준)를 돌파했고 글로벌 에너지 물류 공급망은 붕괴 위기에 처했다. 한국은 28억 유조선이 간해 70%가 넘는 중동산 원유와 나프타(납사) 공급이 차단되면서 에너지, 물류, 원자재 삼중(三重苦)로 기업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어 제품 가격 상승으로 서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로 하향할 정도로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는 급등한 휘발유 가격을 잡기 위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2조 2천억원 규모의 추경으로 대응 중이다. 여전히 달러 강세로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품 물가를 압박하고 있다.

1970년 이래 원유 공급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이었다. 경제이론상 원유는 핵심 생산요소이기에 가격 상승으로 기업의 비용이 올라 재화와 서비스 공급 감소를 초래한다. 이는 총공급곡선(AS)을 왼쪽으로 이동시켜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이러한 충격의 시발점은 제4차 중동전쟁 여파

로 발생한 제1차 오일쇼크(1973-1974)였다. 당시 석유수출국기구(OPEC) 내 아랍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을 제한하면서 유가가 배럴당 3달러에서 12달러로 4배 폭등했다. 수입국들은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었으며, 미국 또한 소비자물가지수가 10%를 넘었고 실업률이 49%에서 85%로 급등했다. 당시 중화학 공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던 한국도 경상수지 적자가 심화되는 위기를 맞았지만 아랍권과의 우호 관계로 중동 건설 붐에 참여하여 '오일달러'를 환수해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게 됐다.

이어 발생한 제2차 오일쇼크(1979-1980)는 이란 혁명으로 석유 생산이 중단되어 유가가 13달러에서 30달러 후반까지 폭등하여 1차 때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다. 한국은 1980년 정치·사회적 혼란까지 겹치며 15%라는 첫 역성장장을 기록했고, 물가 상승률은 20-30%에 육박했다. 정부는 중화학 공업의 중복 투자를 조정하고 강력한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1980년대 중반 '3저 호황(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을 맞이하여 한국경제는 다시 고도 성장기에 진입했다. 과거 1차 오일쇼크 당시 정부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임을 강조하여 경북공 등 주요 고공의 난방을 중단하고, 자동차 출퇴근, 승용차 공휴일 운행 금지, TV 방송 시간 단축, 주유소 시간 영업 금지 등 강도 높은 통제 정책을 펼쳤다. 가로등 격제와 네온사인 삼야 금지 등으로 거리는 암흑천지가 되었고, 결국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가 발동되기에 이르렀다. 한편으로 원활한 석유 수급을 위한 '실용 외교'의 일환으로 1976년 서울 한남동에 이슬람 중앙성원이 건립되기도 했다.

제1·2차 오일쇼크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절

약과 통제, 심리적 구호, 살리적 외교로 대응했던 시기였다면, 이번 위기는 에너지원의 다변화와 전환이라는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아쉽게도 정부 규제는 기존 관행의 답습이다. 그간 LNG, 원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의존도를 분산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원유 공급 차단은 전혀 다른 파괴적인 경제적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 위기는 자원이 빈약한 한국에 새로운 기회가기도 하다. 미·중 회도류 갈등에서 보듯, 이제는 전기차 전환만이 해결책이 아니다. 이것은 원유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 니켈, 희토류 등 특정 국가(중국) 의존도가 높은 자원에 대한 '새로운 광물자원쇼크'라는 또 다른 암초를 만났기 때문이다. 전기차와 데이터센터 등 '전기 먹는 하마'가 늘어날수록 전력 수요는 급등할 수밖에 없다. 결국 지능형 전력망(스마트 그리드) 구축과 함께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가 뒷받침되는 에너지 안보 체계 구축이 기회의 길이다.

한국경제는 원유 공급 충격이 지속될수록 스태그플레이션과 고환율의 늪에서 허우적 거릴 것이다. 정부는 추경으로 민생을 살피고 효율적인 재정 지출로 경기 위축을 막아야 하며,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안정될 때까지 금리를 신중히 운용해야 한다. 산업 정책은 수출 시장 다변화와 공급망 강화로 반도체, 자동차, AI 산업의 성장세를 유지하여 고환율을 상쇄하고 외화 유입을 촉진해야 한다. 에너지 수입의 대체 공급선과 글로벌 공급망 시스템 확보만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한국경제의 근간이 될 것이다.

기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인재연구원 설치가 필요하다



김 이 수 전남도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의 의미는 행정구역의 단순한 통합에 있지 않다. 통합의 성패는 결국 사람에게 달려 있다. 산업을 키우는 것도 사람이고, 교육을 혁신하는 것도 사람이며,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떠받치는 것도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통합특별시가 지금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과제는 지역의 미래를 떠받칠 인재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길러낼 것인가 하는 문제다. 그 해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인재연구원 설치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은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지역인재 양성을 통합특별시 발전의 핵심 축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길러내고, 그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며, 교육과 산업, 정주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이 법의 취지를 현실 정책으로 구현할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연구 거점이다.

무엇보다 인재양성에 대한 발상부터 바뀌어야 한다. 인재는 어느 한 시점에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 유아기에 형성된 기초역량이 초등교육으로 이어지고, 초·중·고교육에서 길러진 학습력과 진로의식이 고교 단계의 심화학습으로 연결되며, 대학과 직업교육, 산업현장, 평생학습으로 확장될 때 비로소 지역의 인재생태계가 완성된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의 정책은 유아교육, 학교교육, 대학, 평생교육이 서로 분절된 채 운영돼 왔다. 이렇게 흩어진 구조로는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길러내기도, 붙잡아 두기도 어렵다.

이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인재연구원이 필요하다. 이 연구원은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유아부터 평생교육까지 이어지는 성장 경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교육과 산업, 정주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지역인재양성의 방향을 연구·제시해야 한다. 단기 사업을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인재생태계를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하는 정책 연구의 중심축이 돼야 한다.

그 기능도 분명하다. 첫째, 생애단계별 인재양성 전략을 연구해야 한다. 둘째, 교육과 산업을 연계하는 정책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셋째, 지역정주형 인재정책을 연구해야 한다. 넷째, 평생교육을 포함한 순환형 인재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연구해야 한다.

연구원의 운영에서는 거버넌스 연계도 중요하다. 다만 연구원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전문연구기관에 있다. 연구원은 정책을 직접 집행하기보다 과학적 분석과 중장기 전략 수립, 정책 대안 제시를 담당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연구 성과가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지역대학, 산업계, 평생교육기관과 긴밀히 연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별시청·교육청·대학이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뒤 연구의제와 정책 수요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연구원은 이 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수렴 하되 독립적인 분석과 정책 제안을 수행해야

한다. 산업계와 연구기관, 평생교육기관까지 참여하는 개방형 자문체계도 마련해 생애 전 주기 인재양성 수요를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 연구과제 역시 생애 전 주기를 포괄해야 한다. 유아기 발달과 교육격차 연구, 초·중·고 기초학력과 진로성장 분석, 고교 단계의 지역전략산업 연계 교육과정 연구, 대학-기업-연구기관 협력 모델 개발, 청년 정주 실태 분석, 재직자 재교육과 중장년 재도약 학습체계 연구, 지역사회 기반 평생학습 플랫폼 연구까지 아울러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인재연구원은 교육정책 연구기관이자 지역인재생태계의 데이터 허브, 정책 허브, 협력 허브가 돼야 한다.

이제 인재정책은 몇몇 우수한 사람을 선발해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모든 아이와 시민이 생애 어느 단계에서든 성장의 사다리를 다시 오를 수 있도록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유아기에서 출발한 가능성이 초·중·고교육에서 자라고, 중고교에서 방향을 찾고, 대학과 산업현장에서 꽃피우고, 평생학습을 통해 다시 확장되는 구조, 그것이 바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구축해야 할 선순환 지역인재양성체계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인재연구원은 그 체계를 뒷받침할 전문연구기관으로 자리해야 한다. 특별법이 길을 열었다면 이제 지역은 그 길 위에 실질적인 연구 기반과 정책 연계 체계를 세우야 한다. 통합특별시의 진화 경쟁력은 사람을 키우고, 사람을 남게 하고, 사람을 다시 성장시키는 힘에 있다. 선순환 지역인재양성의 거점으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인재연구원 설치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독자투고

'공존'의 약속 평화적 집회 시위 이경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1항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소중한 기본 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필수적인 자양분이다.

러한 대립의 역사를 뒤로 하고, 집회 대응의 기초를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패러다임으로 전면 전환했다. 주회 축이 질서 유지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스스로 현장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경찰은 대화 경찰관을 통해 끊임없이 소통하며 자율적인 시정을 돕는다. 자유가 온전히 존중받기 위해서는 그 바탕에 모두의 안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물론 평화

시위 시범구역 운영 등 새로운 시도에 대한 우리의 시각도 존재한다. 법질서가 확립된 토양 위에 평화적인 집회 문화가 뿌리내릴 때 비로소 우리는 선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 집회 현장이 날 선 갈등의 공간을 넘어 서로를 향한 배려와 책임이 빛나는 신뢰의 공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정규·담양경찰서 경비반보교)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특별시민 기대에 못미친 광주 광역의원 정수 확대

6·3 지방선거에서 광주 국회의원 선거구 가운데 동남갑·북갑·북을, 광산을 등 4곳에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도입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라 광주 지역 구 시의원은 20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난다. 비례대표 정수 비율도 10%에서 14%로 상향됨으로써 4명까지 증가한다. 광주 정치권이 통합특별시 출범을 맞아 전남과의 인구 비례 형평성을 이유로 확대를 요구했지만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양성과 대표성, 비례성을 강화하고 민의를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평가하나, 민주당으로 과도하게 쏠린 구도에서 북수 공천을 감행할 경우 오히려 지방 권력의 독점만 심화시킬 것이라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은 개편된 지역구에서 기존 후보들을 유지한 채 당원 투표로 1차 경선을 치른 뒤 중대선거구에 한해 탈락자 중 희망자를 모아 다시 투표를 진행해 한 명을 추가 선출하는 기형적인 2차 경선, '패자부활전'을 실시한다.

다차원 경쟁의 막이 올랐다. 광주 광역의원 선거구 4곳에서 3-4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시행된다. 최대 4등까지 당선되는 셈으로 투표의

효능감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보수 정당이 민주당의 높은 벽을 깨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절대 다수당의 틀을 비집고 태세다. 이에 인재 영입에 나서거나 출마 선거구를 조정하는 등 총력전에 임하는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찮다.

극단적 정치 양극화 개선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다. 유의미한 개혁으로 보기 어렵다. 그저 시늉만 냈을 뿐이다. "기대 이상의 기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이라고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4당은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최소 수준으로 '연동형 비례 최소 20% 확대'를 강하게 요청했다. 광역의회 조정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이뤄졌다. 벌써 판도가 요동치는 등 후보들과 유권자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민주당은 '노골적 꼼수'라는 비판을 곱씹어야 한다.

또 있다. 이대로면 전남광주특별시의회 전체 정수 외명 중 전남은 6석(지역구 5석)인데 반해, 광주는 28석(지역구 24석)에 불과하다. 산술적으로 각기 인구 2만9천명당, 5만3천명당 1명으로 표의 등가성 문제가 여전한 것이다. 행정통합에 따른 현저한 대의성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았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천원국수·페이백·택시...광주 자치구 복지정책 수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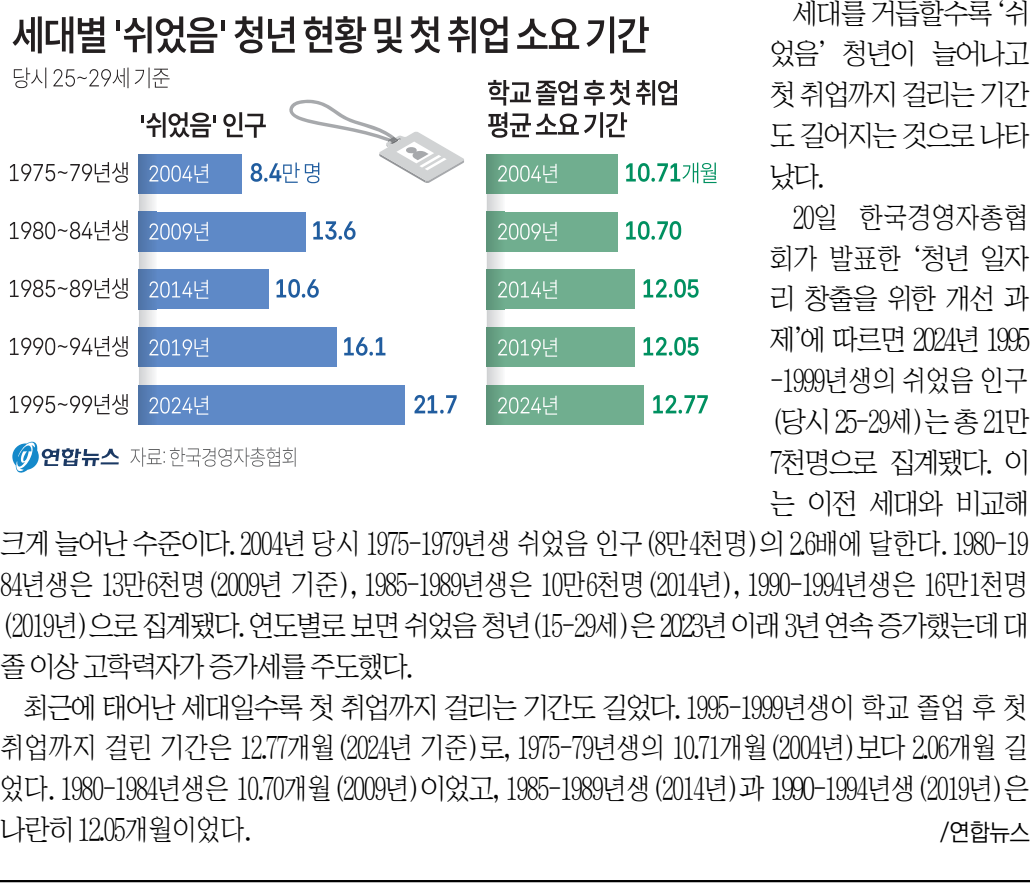
'천원국수'는 광주 서구의 대표적인 복지 프로젝트다. 어르신·임산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당동에서 생산된 우리밀로 만든 국수를 1천원에 판매한다. 2023년 3월 양동전통시장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10호점까지 운영하고 있다. 광산구 '천원한끼'는 우산·도산·월곡·첨단점 등 4개소에서 1천원에 콩나물국밥 등을 제공한다.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천원택시'를 비롯해 골목상권 활성화부터 여가까지 망라한 '천원페이백', '천원문화마실' 등 12가지 정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천원사업'은 다른 자치구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동구는 대중교통 접근이 불편한 지원2동 자연마을 약자를 위해 도입된 '행복택시'의 본인부담금을 기존 2천원에서 1천원으로 낮춰 운행할 방침이다. 남구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지원하는 '천원택시', 산정특례 등 복지 등 기초의료급여 1종 수급자를 위한 '돌봄택시'를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북구는 '아픈아이 돌봄센터'를 통해 자부담금 1천원으로 4-12세 아동의 병원동행과 침대돌봄서비스를 연계,

지원한다. 단순한 복지가 아니다. 단돈 몇 푼 이상의 큰 의미를 담고 있다. 광주 자치구들이 너나없이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 등을 보듬는 공동체 건설에 전력하는 중이다. 특히 고물가 시대 실질 부담을 줄였다. 일상 생활에 불편함을 덜어주고 소소한 행복을 선물하고 있다. 시너고 고용 및 건강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일석삼조의 혁신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선한 영향력을 지역에 전파시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 작지만 큰 변화다.

앞으로도 본분을 망각해선 안 된다. 가정비만 등의 민생사업에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고 더 풍성한 혜택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현상 중심의 행정을 공유하길 바란다. 민관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향후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정책을 추가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야 하겠다. 전국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다양한 '천원 시리즈'를 올해 1월부터 시행했다. 북구는 '아픈아이 돌봄센터'를 통해 자부담금 1천원으로 4-12세 아동의 병원동행과 침대돌봄서비스를 연계,

그래픽 뉴스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부회장 馬讚皓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 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650-2019
정치부 650-2030	사 진 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 설 실 650-2006	편집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 V 본 부 650-2009	사업 본 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 무 국 650-202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에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2024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제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